

마스크 착용·손씻기…수험생 행동수칙 철저히 지켜야

코로나시대 ‘방역 수능’

〈상〉확진자 속출…최악 수능 막아라

코로나19 확산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주일 밖에 남지 않은 수험생들은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철저한 방역과 함께 수능을 치러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컨디션 조절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칸막이가 둘러쳐진 책상에 앉아 마스크를 쓴 채로 시험을 봐야 하는 만큼 당일 현장 적응도 관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일보에 대한민국 역사상 코로나19 사태 속 처음으로 치러지는 수능과 관련해 수험생들의 실태와 교육당국의 대비책, 수능 이후 전망 등을 3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수능생도 부모도 불안 초조

컨디션 조절·현장적응 관심

당국, 확진·자가격리자 대비

별도 시험장 운영 등 총력

광주시 남구 한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인 김모군은 ‘코로나19’ 여파로 2주 전부터 재택 학습을 하고 있다. 김군은 “학교 수업 이외에 면접 준비도 있지만 우선 안전이 중요할 것 같아 집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특히 수능 당일 상황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 김군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하고, 가립막도 시험지 규격이랑 책상 크기를 봤을 때 불편할 것 같다”며 “중간에 점심 먹을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수생인 박모(19)군 역시 감염 우려 탓에 도서

관이나 독서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답답해했다. 그는 “독서실 가기도 꺼려진다”며 “집에서 공부할 때는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코로나 수능’에 컨디션 조절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광주 광산구의 한 고교에 다니는 최모양은 “집 밖으로 아예 나가지 않고 있다. 혹시라도 열이 나거나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된다”며 “수능 후에도 계속 실기나 면접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크다”고 했다.

매일 ‘살얼음판’을 걷기는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고3 수험생 딸을 둔 한 학부모는 “수험생은 불안한 시기인데 코로나19까지 더해져서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며 “딸아이가 스타벅스 카페를 가고자 했는데, 가지 말라며 말렸다”고 했다. 이어 “온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봐야 하고, 좁은 책상에 가립막까지 설치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시험 보는 아이들이 가엾다”면서 “아이들

을 위해서라도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에서는 수능을 1주일 앞둔 현재까지 학생들의 확진이 잇따르고 있어 교육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19일과 20일 중·고생 2명이 확진된 데 이어 25일 또다시 고등학생이 확진돼 비상이 걸렸다.

25일 현재까지 광주에서는 고3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밀접 접촉자로 자가 격리된 수험생들이 다수 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교육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전남에서는 현재 영암과 순천에서 고교 3학년 3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40여명의 수험생들이 격리조치된 상태다.

이들 확진자 3명은 수능 전까지 완치되지 않을 경우, 목포의료원과 순천의료원에 마련된 시험병상에서 시험을 본다.

이처럼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

이자,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수능 시험일인 내달 3일까지 수험생 방역관리 특별기간을 운영하며 방역활동에 고삐를 죄고 있다.

고등학교는 수험생인 3학년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고, 교직원들에게는 외부 모임 자제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수능 당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도 준비했다. 시·도교육청은 수험생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광주 2곳과 전남 7곳에 별도시험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 임시 전문가는 “수능시험이 코앞인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로부터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므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등 행동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등 모두가 인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25일 오전 광주시 동구 광주지법 정문에서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전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전두환 재판 생중계,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라”

광주 시민사회단체·정치계 촉구

전두환(89)씨의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 전 국민들이 5월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18 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25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 재판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재판인 만큼 생중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5월단체와 광주지역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 국민이 보고 싶어 하는 재판 장면을 소수만 방청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

소통의 관점에서 맞지 않다”면서 “재판부는 전두환에 대한 선고재판을 생중계해 국민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도 이날 “전두환씨 선고재판은 생중계 돼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번 재판은 단순히 사인(私人)간 명예훼손을 다루는 재판이 아니다”면서 “1980년 5월, 정권 전탈을 목적으로 평범한 시민의 목숨을 빼앗고, 광주를 피로 물들인 세력을 심판하는 ‘세기의 재판’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면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선고 결과를 생생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내외적 관심이 높은 이번 재판이 생중계되지 않아 부정확한 정보와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면, 생중계됐을 때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전씨 재판의 생중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지난 24일 광주전남기자협회·사진기자협회·영상기자협회는 법정 내부에 대한 촬영 및 생중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문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특하면 사고 광양포스코, 시민 공포에 떠다

45분 늦장 신고… 철저한 조사 요구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1년 여 만에 다시 폭발 사고(광주일보 11월24일 6면)가 발생, 3명이 숨지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철소 특성상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제철소측이 신고를 늦게 하는 등 주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비판도 크다.

광양경찰은 25일 오후 2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소방청 감식반 등과 공동으로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특히 작업자들의 안전규정 준수 및 지연 신고 경위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광양제철소의 경우 최근 1년 간 4차례의 사고가 잇따랐고 10여명의 작업자가 다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해 12월 24일 폐열회수 발전설비 시운전 중 폭발과 화재가 발생, 근로자 5명이 다쳤고 지난해 7월에는 제철소 내 코크스(석

탄) 공장과 고로 전기 공급 등이 끊기면서 배관 안에 있던 가스에 불이 붙었고 화염과 검은 연기가 광양 시내를 뒤덮어 지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지난해 6월 1일에는 포스코 내 포스넵(니켈 추출 설비) 공장에서 밸브 교체용 용접 작업 과정에서 폭발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노동계와 정치권은 안전 규정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매년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안전 시스템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스코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시각보다 45분이나 늦게 소방당국에 신고했다”면서 “포스코의 능동대응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예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포스코는 이날 “광양제철소 산소 배관설비 사고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근절 단속장비 강화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과속·불법 주차차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장비 설치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5일 시·구청과 협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과속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이날 정례적인 기자회견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질문을 취합해 답변 자료를 공개했다.

경찰은 그동안 지자체·교육청과 합동으로 불법 주차차 단속을 하고 이동식 카메라와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해왔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장비 99대 설치를 완료했으며 추가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현재 광주 시내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589곳으로, 경찰은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852곳 중 신호기가 없는 455곳에 대해 단계적으로 신호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과 상담]